

정권 초 반복되는 부패청산 지난 정부 핵심사업 겨누나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에도 '사자방' 비리 철저 조사 언급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반부패협의회) 출범과 함께 방산비리를 정조준했다. 이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 정권의 핵심 사업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7일 반부패협의회 복원을 지시하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조사 착수 나올 만인 18일 하성용 KAI 대표가 일감을 몰아주고 대금의 일부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들의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산비리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는 불가피한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드러난 수리온 관련 감사결과를 감사원이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수리온 개발사업 부실 의혹으로 수사가 의뢰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돌연 사퇴한 상황이다. 장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

반부패협의회 가동과 함께 드러난 이같은 의혹으로 사정수사는 방산비리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청산특위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반부패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다양한 적폐 수사의 신호탄을 방산비리 분야에서 먼저 쏘아올렸다는 것이다.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를 총칭하는 이른바 '사자방'의 한 축인 자원외교도 수사선상에 오를 기미가 보이고 있다.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정문회 과정에서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 원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5월22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네번째 감사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사자방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일 때 "정부장은 국정조사와 별도로 사자방 비리 진상을 스스로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에 손해 입힌 사상 초유의 초대형 비리인 만큼 정부가 가진 조사, 감사, 수사권 등을 총동원해 진상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반부패 드라이브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비정상적 정상화를 위한 단체가 반부패협의회고, 적폐청산을 장기과제로 두고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것은 너무도 적절하다"고 호평했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는 "적폐와 부패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적"이라며 "신명성을 보여 주지 못하면 정권이 힘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정라인을 동원한 정치보복으로 비화되는 데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박 교수는 "지금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비난"이라며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을 목표 삼아서 몰아치기 하듯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나가면 적폐청산, 반부패가 아니라 보복이다.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홍준표, 탈당과 중용하며 바른정당 압박 가속

당직 대거 등용...친홍체제 구축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준표(왼쪽 두번째) 대표가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원내대표, 홍대표, 김태흠 최고위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탈당과 끌어안기'를 통한 친홍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이미 홍 대표는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인선에 바른정당 탈당파를 대거 포함시키면서 이같은 계획의 일단을 내비친 바 있다.

이어 홍 대표는 17일 홍보본부장, 노동위원장,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해 신임 당직자 20여명에 대

한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여기에도 바른정당으로부터 복당한 의원들의 이름을 여러 명 올렸다. 김재경 의원은 중앙지능위원장에 임명됐고, 이은재 의원은 대외협력위원장, 김재경 의원과 박순자 의원은 홍보본부장에 각각 선임됐다. 탈당파와 초재선들이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계속 남아 있던 의원들을 제치고 당직에 대거 등용된 것

이다. 홍 대표의 이같은 당직 인선 역시 이들을 통해 확실하게 친홍체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장성호 건국대학교 교수는 "당권의 보호를 사람으로써 하는 것"이라며 "내부적 유지를 위해서 자기 사람을 많이 심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편을 확실하게 구축해 자신의 옆에서 끝까지 호흡을 맞추며 함께 갈 사람을 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당직 인선을 통해 자신의 우군을 당내 확실하게 심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의 탈당파 끌어안기에는 또다른 전략도 들어있다. 바른정당 의원들을 한명이라도 더 자유한국당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실제 바른정당은 20석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간신히 채우고 있다. 보수의 적통을 놓고 경쟁하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서둘러 한 명의 의원이라도 입당시키는 게 급선무다. 탈당파들의 자유한국당 주요 보직 임명에는 이같은 홍 대표의 바람도 녹아 있다.

서울=김윤호 기자

우원식 "악의적 언플" vs 김동철 "말도 안되는 얘기"

일자리 추경 핵심 '공무원 증원' 놓고 신경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핵심인 공무원 증원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우 원내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을 거론하며 공무원 증원 반대 방침을 비난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왜곡한 악의적 언플"이라고 비난하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 전 대선 후보의 공공 부문 일자리 증원 공약을 언급한 뒤 "후안무치하고 자가당착적"이라고 힐난한 바 있다.

그는 "어제 우 원내대표가 공무원 추경과 관련해 우리 당 대선공약까지 언급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

대라고 비난했다"며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건 안전과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지 문재인 정부처럼 단순히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차기 정부에 30년간 500조원이 넘는 부담을 안기는 공무원 증원을 일기 5년의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국민적 동의 없이 취임 두 달 만에, 그것도 추경이란 편법으로 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인기영합식 정책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자"며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낭독한 뒤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기사 보다가 너무 화나서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우원식이 국민의당 공약을 왜곡해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한다"며 "국민의당 공약은 일선 소방관 확충, 치안 경찰 증원,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등이다. 그럼 이게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면 일비를 뽑는 거냐. 그것도 세금으로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상대 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악의적 언플(언론플레이)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옳지 않다"며 "정말 이러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근거를 갖고 사리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지난 연말 예결위에서 한 수정안 결론을 자꾸 지키지 않고 변경하려다보니 무리한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당은 더 이상 문재인 발목잡기,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여야 4당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정부조직법 합의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 부대표,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김성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부대표.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